

[종합]

대한화재 콜센터 광주 온다

市와 300석 규모 투자양해각서 체결 연내 오픈... 내년까지 350명 신규채용

광주시가 (주)대한화재해상보험과 콜센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콜센터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대한화재와 300석 규모의 콜센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날 현재 23개사 4천830석의 콜센터를 유치했거나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콜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난 2003년 당시 15개사 2천237석에 머물렀던 광주지역 콜센터 고용 인력은 3년 동안 배 이상 증가해 22개사 4천530석으로 늘었으며, 이번 대한화재와의 투자양해각서체결로 23개사 4천830석으로 증가했다.

대한화재는 우선 올 연말까지 100석 규모의 콜센터를 금남로에 열고, 내년 초까지 300석 규모로 확대해

35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콜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한화재와 접촉해 지역의 인력 현황과 지가(地價) 및 건물 임대 현황, 통신인프라,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대한화재 콜센터는 회사보유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보장 분석서비스와 개인별 보장설계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하나로 텔레콤 콜센터 100석 유치에 이어 (주)해양도시가스 콜센터 22석 유치, (주)급호생명 60석을 유치해 현재까지 22개사 4천530석의 콜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콜센터 유치 성과의 배경에는 제도적 지원이 한몫하



박광태 광주시장(왼쪽)과 이준호 (주)대한화재해상보험 대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상황실에서 콜센터 300석, 인력채용 350명 규모의 콜센터 유치에 따른 투자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광주시청 제공>

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해 광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4억원까지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최현주 광주시 경제통상국장은 “콜센터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기반

과 산업기술 정보망 등 인프라를 구축해 광주가 콜센터 투자의 최적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10년까지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을 위해 청년층의 직접 고용효과가 높은 콜센터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의회 우리당 의원 5명 의장단 불신임안 제출

광주시 남구의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5명은 10일 전반기 의회 원구성이 민주당 위주로만 구성됐고 원구성에서 배제됐으며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남구의회 신인용·김만근·조영표·김재섭·최민승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지난 5월 남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50조 3항과 상임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는 남구의회위원회 조례 9조를 위반했다”며 남구의회 유정심 의장과 조기부 부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불신임안을 남구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유정심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원구성이 전부터 의장 자리를 주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의장을 못했다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민주당 7석, 열린우리당 5석으로 구성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일 퇴임식을 마친 박재운, 손지열, 이강국, 강신욱, 이규홍(왼쪽부터) 대법관이 환송 나온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불신 해소돼야”

강신욱 대법관 퇴임사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운 대법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응훈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선임 대법관인 강신욱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과예우 등의 말로 상징되는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이다.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국민이

아직도 이런 말을 믿고 있어 법조인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행정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채 모든 판단을 법원에 미루는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다. 강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분열과 대립 양상이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마땅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넘어 자기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권일기자 cki@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18일 인사청문회 확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하루

동안 열기로 확정했다. 교육위는 또 청문회 참고인으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목진후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대일외고 김대용 교감 등 4명의 교육계 인사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이강두 ‘생체협’ 회장 승인 거부

문광부 “국회의원이 맡는 것은 부적합”... 재선출 통보

정부가 이강두(한나라당 의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오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장 당선자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회장직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선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 유관 단체장의 취임 승인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생체협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조직망이 있고 국민의 40%가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가 없는 중립적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두 당선자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김 장관의 발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화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집안꼴이 이게 뭐냐?!

공공비축 쌀 선금금 확정

80kg 가마당 14만245원

당정협의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협의회를 열어 올해분 공공비축용 쌀 매입 선금금 규모를 정곡 80kg 한가마에 14만245원으로 합의했다.

우리당 변재일 제4조정위원장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선금금을

지난해 공공비축용 쌀 최종 정산가 수준으로 정했다”며 “이는 쌀 직불제 목표가격(17만83원)의 82%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2% 포인트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산지 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13% 하락해 농가에서는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쌀값도 내

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분 공공비축용 쌀 매입물량은 정부가 제시한대로 350만석으로 하되, 추수기 작황이 좋을 경우 매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시장가격에 매입하던 산물벼(건조 및 정선작업 이전의 벼)도 포대벼(포장이 완료된 벼)와 같은 가격에 매입하는 한편 정부가 농협 등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사는 산물벼 물량도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박광태광주시장-지역 국회의원 '진실게임' 새국면

R&D(연구개발) 특구 與 반대?

광주정상회의 예산 삭감 주장?

과기부 “그게 아니다”

강봉균 의장 “안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여당 국회의원들간에 R&D(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광주지역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당시 예결위위원장)이 “광주지역 의원들이 정상회담 예산 삭감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측은 정부 부처인 과기부나 같은 여당 의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종전의 주장을 고수했다.

과학기술부는 10일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에 보낸 자료를 통해 ‘과기부가 광주와 대구, 대덕을 특구로 지정해야 한

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대덕만 약속했으므로 광주와 대구는 대덕 다음에 특구 지정 추진을 하라고 살들했다’는 박광태 시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당시 예결위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광주지역 의원들이 정상회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는 박 시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 측은 “당시 오명 과기부 장관이 박광태 시장의 면담을 통해 ‘국회에서 광주와 대구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법을 만든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과기부나 여당 의원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불리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고 제2006-33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선거일 공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5조(선거일공고)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선거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명 :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선거
2. 선거일시 : 2006. 7. 31 (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투표장소 :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장소 (추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참조)

2006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안내 ◆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법위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바랍니다.

▣ 주요 신고·제보대상

- 금품제공을 통한 선거인 매수행위
- 금품·음식을 제공 등 기부행위 또는 이를 요구·수령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하여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 전화·방문·선전물 등을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위반행위제보 : (062)382-4773, 5384, 1588-3939
gj.election.go.kr